

낙농가단체 공동보도자료

제공자 : 한국낙농육우협회(회장 이승호)
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(회장 맹광렬)
제공일 : 2021년 9월 16일(목)
연락처 : 전화 (02)588-7055, 팩스(02)584-5144
담당자 : 정책기획본부장 한지태, 과장 이정훈

농식품부 낙농산업발전위원회, 거수기로 활용해선 안 돼!

- 낙농가단체, 2026년 관세제로화 대비 합리적인 대안이라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-

- 한국낙농육우협회(회장 이승호)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(회장 맹광렬)[이하 '낙농가단체']는 9월 15일(수) 낙농제도개선 및 생산비절감 관련 생산자의견을 농식품부(축산정책국)에 공식 제출하였다고 밝혔다.
- 낙농가단체 관계자에 따르면, 농식품부는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 방안 마련(낙농산업발전위원회)과 관련하여, 낙농가단체, 유가공협회 등에 의견을 조회(8.27, 8.31)하였고 낙농가단체들이 현장 의견을 종합하여 생산자의견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.

생산자 기본입장

- 낙농가단체는 낙농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“생산자들은 2026년 관세제로화 대비 낙농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으며, 합리적인 대안이라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”이라고 밝히며,

농식품부가 지금까지 해온 바와 같이 낙농제도개선을 표방하면서 '원유가격 인하'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.

- 생산비 절감대책과 관련해서는, 우유생산비의 55%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실질적인 절감대책 마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원유가격 인하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.
-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, 낙농가단체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며, 농식품부의 편향적인 언론플레이로 인해 우유·낙농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.
- 또한 농식품부가 실무추진단·자문단에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면서 연구용역을 밀실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거수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, 연구용역 추진 및 초안·최종안 마련 전에 이해관계자들과의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을 상설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.

낙농제도개선 생산자의견

① 원유가격 연동제 개선

- 낙농가단체는 원유가격은 낙농특성에 따라 생산비를 근거로 결정해 왔다고 밝혔다. 낙농진흥법 개정(1997년) 시 원유가격 결정원칙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아, 협상시마다 생산자, 수요자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으며, 이에 따라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을 통해 원유가격 결정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부가 설명했다.

- 농식품부와 유업체의 주장대로 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를 원유가격 협상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제공(① 제품군별 원가 및 소비자권장가 현황, ② 제품군별 손익현황, ③ 제품군별 국산 및 수입산 사용현황)이 필요하다고 밝혔다.

* 유업체별, 제품별 원가자료를 외부기관(농식품부 또는 낙농진흥회)에서 취합·분석하여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(회계법인 검토)

□ 낙농가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.

- 첫째, 원유가격 연동제 개선안으로 ① 생산비를 근거로 하는 현행 협상방식 운영, 다만 연동제 적용기준 조정 검토 가능, ② 실질적인 시장수급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낙농가에게 생산자율권을 부여하는 낙농제도 개편병행 필요 (생산자와 수요가간 대등한 거래교섭력 확보)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.

* 시장원리 도입을 위해서는 가격결정 원리 및 경쟁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하나, 유업체가 집유, 쿼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는 물량도, 가격결정권도 없음

☺ 우리나라와 같이 순수입국인 일본, 캐나다도 생산비를 근거하여 가격결정

- ☞ 캐나다(Class I ~ IV) : 생산비 50%, 소비자물가지수 50%를 기초로 전국가격 산정체계(National Pricing Formula)를 통해 주(州) MMB(Milk Marketing Board)에서 결정
- ☞ 일본 : (음용유) 생산비 등을 고려 생산자, 유업체 협상을 통해 결정, (가공유) 생산비 기초로 정부가 결정

- 둘째, 우유 유통마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, 관계 부처(농식품부·공정위), 유통업체, 유업계, 생산자, 소비자 등 「우유 유통마진 개선을 위한 협의체」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요구했다.

- 우리나라 유통마진('19년기준)은 38.0% 수준인 반면, 선진국은 10~20% 수준이며, 과도한 유통마진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원유가격(농가평균수취가격 기준)은 ℓ 당 454원 상승한 반면, 우윳값(AT센터 발표 우유소매가격 기준)은 1,228원 상승했다고 지적했다.
- 유업체는 원유가격 외에 원가부분을 원유가격 상승시 반영해 왔으며, 원유가격 인하 시('16년)에는 제품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, 우유시장의 과도한 제품가격 인상이 원유가격 결정구조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.

* 이중적시장구조 : ①원유시장(낙농가↔유업체), ②우유시장(유업체↔유통업체)

원유기본가격 및 우윳값(소비자권장가) 추이

(단위 : 원/ℓ)

구분	'04년	'08년초	'08년	'11년	'13년	'16년	'18년
원유기본가격 증감(A)	67	-	120	130	106	△18	4
우윳값(소비자권장가) 인상(B)	350	100 ¹⁾	350	200	200	0	250 ²⁾
<u>차이(B-A)</u>	<u>283</u> <u>(422%↑)</u>	=	<u>230</u> <u>(192%↑)</u>	<u>70</u> <u>(54%↑)</u>	<u>94</u> <u>(89%↑)</u>	<u>18</u> <u>(100%↑)</u>	<u>246</u> <u>(6,150%↑)</u>

주 1) 팩 등 원가상승에 따라 별도 제품가격인상 단행

2) 용량변경(1ℓ → 0.9ℓ)에 따른 실질적 가격인상(250원, A유업·B유업) 효과 발생

○ 셋째, 국내 사료원료(곡물) 자급기반 및 낙농가 사료비 절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.

- 지난 20년간 생산비는 76.06% 폭등했으며, 주원인은 사료비 폭등(87.32%), 농구비·시설비 폭등(83.02%), 고용노동비 폭등(313.83%)인 것으로 나타났다.
- 특히 국내생산 배합사료 원료의 해외의존(95% 차지)으로 인해 국제곡물가, 해상운임, 환율 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에, 생산비절감을 위해서는 사료비절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낙농가 단체의 입장이다.

○ 넷째, 우유 최저판매가격제 도입 추진을 요구했다.

- 유업체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거래교섭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른 우유 할인판매(1+1, 덤핑)가 만성화되어 있고, 이는 우유가치하락과 농가쿼터삭감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.

- 연구용역을 통해 업체 자율협약 및 공정거래법 추진하는 방안이나 법개정 방안 등을 검토하여, 캐나다(퀘벡州)가 운영중인 「우유 최저판매가격제」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.

* 캐나다 퀘벡주는 「농업, 식품 및 어류 제품(RSQ, M-35.1장)의 마케팅을 존중하는 법률」을 근거법령으로, 주정부에서 우유의 최저, 최고가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

② 쿼터제 개선 및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

□ 낙농가단체들은 낙농진흥법 개정에 따라 우유수급조절기구로 출범('99)한 낙농진흥회는 태생적 한계와 운영 실패로 전국적인 수급조절에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.

원유생산 현황

구 분	2002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20년
전국	2,537천톤	2,214	2,168	2,070	2,089
낙농진흥회	1,542천톤	514	510	493	494
- 낙농진흥회 비중	61%	23	23	23	24

[자료출처] 낙농진흥회

○ FTA협정에 따른 국경보호조치 철폐에 따른 수입유제품 증가로 인해, 국산우유자급률 하락과 낙농기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.

* 치즈자급률 : ('09) 8.6% → ('14) 4.4 → ('20) 2.3 / 일본('19년기준) 13.1%

* 국산우유자급률 : ('09) 69.5% → ('14) 60.8 → ('16) 52.9 → ('18) 49.3 → ('20) 48.1

* 낙농가수 : ('09) 6.8천호 → ('14) 5.8 → ('17) 5.3 → ('19) 5.0 → ('20) 4.9

○ 이에 따라 우유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, 시유소비 정체 내지 감소, FTA 발효에 따른 유제품 수입 증가로 만성적인 수급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

- 정부가 한·EU, 영연방, 뉴질랜드 FTA 보완대책으로 도입한 「가공원료유지원사업」은 당초계획(매년 20만톤, 300억원 수준지원)과 달리 '21년 현재 186억원(지원물량 4만5천톤) 예산지원에 그치고 있으며, 지원대상도 당초 낙농가 지원이 아닌 유업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.

□ 낙농진흥회가 쿼터제 도입('02.11)한 후 집유주체(유업체)는 연차적으로 자체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, 전국단위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.

○ 집유주체별 수급상황에 따라 개별적 쿼터관리로 농가간 형평성 문제 확산 및 낙농가-유업체간 갈등이 상존(유업체에 의한 강제적 감축)하고 있으며,

○ 우유과부족 시 유업체별 수급조절(쿼터조정)로 인해 불안정한 수급불균형 및 농가 간 형평성문제의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.

* 2011년 구제역 당시(우유부족) 집유주체별 무분별한 쿼터증량으로 2014~2015년 수급불균형 야기 → 2014~2015년 유업체별 감산정책으로 농가 간 형평성 야기(증량집유주체↔미증량집유주체)

낙농가보유 쿼터현황

(단위 : 톤/일)

구분	'10.12월(기준쿼터)			'13.5월(관리쿼터)			'20.2월 쿼터		
	기본	버퍼	계	기본	버퍼	계	기본	버퍼	계
총 쿼터내역 (22개집유주체)	5,974.0	119.9	6,093.9	6,186.1	188.7	6,374.8	6,115.4	42.6	6,158.0
-19개 집유주체	5,974.0	119.9	6,093.9	6,186.1	188.7	6,374.8	6,053.4	42.6	6,096.0
-2013년 이후 시행업체	-	-	-	-	-	-	62	-	62.0

[자료출처] 낙농진흥회

○ 낙농가는 쿼터인수도 시 각 소속 집유주체에 인수도물량의 10% 반납을 통해 수급안정(진흥회기준 지난 10년간 약 2천억원 규모의 정부수급조절자금 절감)에 기여해 왔으나, 유업체 및 유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는 FTA로 막대한 부가이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.

* 유업체 분유류수입(제품기준) : ('10년)7천톤 → ('20)29천톤 ⇨ 22천톤(314.3%↑)

* 유업체 치즈류수입(제품기준) : ('10년)16천톤 → ('20)33천톤 ⇨ 17천톤(106.3%↑)

□ 現 쿼터관리 체계에서는 집유주체별로 각기 다른 총쿼터 및 월별 생산지수 편차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서는,

○ 선진국과 같이 생산자중심의 낙농제도 개편 및 국산 유가공품 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지원 전제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낙농가단체의 주장이다.

○ 현재 우리나라는 용도별시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, 계절편차에 따른 필연적 미사용원유시장으로써, 결국 가공원료유의 원유를 용도별로 분리하는 문제는 전국단위 낙농제도개편방안과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.

* 용도의 명확한 개념설정 및 객관적인 사용실적통계 구축방안 마련 필요 ⇨ 일본의 경우 용도별 사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사용실적 파악 업무수행

※ <참고> 일본 중앙낙농회의(지정단체) 쿼터제 시행 배경

- ㉠ 유업체별 용도별 차등가격제, 종합유가제 시행 → 유업체의 경영전략, 시장거래교섭력에 따라 생산자 유대 차이 발생
- ㉡ 원유공급 부족 시 기본유가 외에 보조금 또는 장려금 등 프리미엄 지급 : 유업체는 낙농가와의 '특약관계'를 이용 프리미엄을 탄력적으로 적용
- ㉢ 유가결정이 낙농가와의 특약관계를 통해 이루어져 생산농가는 거래상대의 변경이 불가능, 유업체 주도의 가격결정

□ 이에, 낙농가단체는 제도개선안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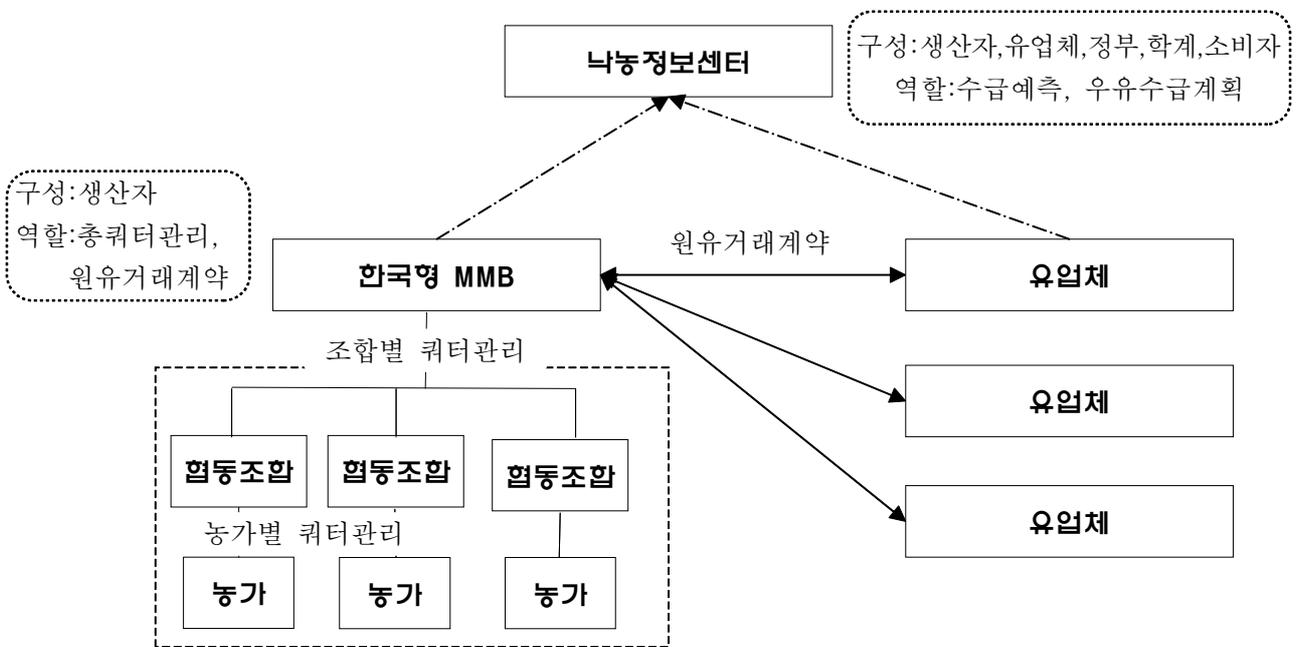
○ 첫째, 중장기 낙농정책 목표를 설정해줄 것을 요구했다.

- 이를 통해 정부가 획기적인 국산 우유·유제품 소비확대 목표*, 원유수급 안정방안 수립(투융자계획 포함)해야 한다는 주장이다.

* 단체급식 공급목표 설정(학교우유급식·군장병 우유급식 등), 국산 유제품(치즈 등) 공급목표 설정 등

○ 둘째, 한국형MMB 설치를 통한 전국단위(단일)쿼터제 실시(낙농진흥법 개정 및 예산확충)를 요구했다.

*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한국형 MMB 설치 근거 마련 : 원유판매계획(정부지침 방식 검토) 마련 후 생산자 희망에 의해 민주적 절차로 참여(낙농선진국 방식)



- 또한, 가공원료유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국산 원유를 사용하여 가공유제품(분유, 치즈, 연유 등) 생산을 희망하는 유가공업체에 국제경쟁가격으로 가공용 원유를 공급하고, 낙농가에게는 우유재생산 기반유지를 위한 생산비와 국제경쟁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.

* 지원물량은 매년 발생하는 계절적 잉여 물량(약 10만 톤 내외) 및 한-EU FTA 체결 시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자 했던 목표 물량(연간 20만 톤 내외)을 고려하여 산정

○ 셋째, 전국단위쿼터제 시행과 함께 무쿼터 납유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유형별 무쿼터 관리방안 마련, 무쿼터 납유 낙농가 각종 정책지원 배제방안 검토, 원유조달체계 정립을 요구했다.

○ 넷째, 수입유제품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국산 유제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요구했다.

- FTA 무관세 TRQ물량 배정, 생산자단체(농협·한국낙농육우협회)로 일원화(수입유제품 원료 판매수입을 재원으로 활용), 수입유제품에 자조금부과 법률제정을 요구했다.

* 일본의 경우, 일호주 EPA 협정 시 치즈 TRQ(무관세) 관리방식 합의내용 : 국산 대 수입산 비율을 1:3.5 사용 시 TRQ 배정 ⇨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, EU 등 유제품수출국과의 FTA협정 시 「국내산 구매조건」 미반영

- 또한, 중장기대책으로 향후 FTA재협상시, 유제품 세이프가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.

< 한·미, 한·EU FTA 협정 관련 무관세 TRQ물량 현황 >

구분	현행관세 (Out-Q)	한-EU	한-미
체결		'09. 07. 13	'07. 04. 02
발효		'11. 07. 01	'12. 03. 15
전지분유	40% (176%)	· 현행관세+무관세TRQ -TRQ : 1,000톤 (3% 증량, 16년차 1,512톤 고정)	· 현행관세+무관세TRQ -TRQ : 5,000톤 (매년 3% 증량)
탈지분유	20% (176%)		
연유	40% (89%)		

[자료출처] 관세청FTA포털(www.customs.go.kr)

○ 다섯째, 낙농특성을 반영한 피해보전직불제 개선을 요구했다.

-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에 대해 낙농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원유가격 기준을 생산량 또는 쿼터기준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다.

③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방안

□ 낙농가단체는 가공원료유 지원체계 구축(전국단위쿼터제와 병행)과 함께 공공부문 우유소비확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.

* 민간부문 : 우유자조금사업, K-MILK사업 진행

○ 세부방안으로 ①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(학교급식과 우유급식 통합), ②군장병 우유급식 제도개선('23년부터 : 1회 용량(200 →250ml), 연간급식횟수 365회로 조정), ③북한어린이 우유지원 제도화(대북 물자지원으로 쌀과 함께 식량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상시적 지원)를 요구했다.

* 국방부는 '군급식 제도개선'의 일환으로 우유류 급식기준(1인 1일 1.2개)을 폐지하고, 흰우유, 가공우유, 두유 등 우유류를 장병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변경 추진

☹️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학교우유급식을 학교급식(밥급식)과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,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은 우유급식 기회가 박탈

<학교우유급식 실시교와 비실시교 간 칼슘섭취 비교>

구분	실시교	비실시교	격 차
남자학생	686.4mg	368.6mg	318mg
여자학생	638.3mg	394.3mg	244mg

[자료출처] 청소년의 학교우유급식 참여와 영양섭취와의 관련성 연구(공주대학교, 2015)

☹️ 군납 흰 우유 1회 감소 시 △71톤, △1.3천만원 영향

☞ 흰우유 군 급식횟수 감소로 국산원유의 고정적 수요처 상실

😊 북한 어린이의 고른 성장과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 후 사회적 비용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대북 우유 지원이 필요한 실정

낙농가 생산비절감 및 경영안정화 방안

- 낙농가단체는 생산비절감대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.
 - 첫째,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생산비의 55%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실질적인 절감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.
 - * (배합사료)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
 - * (조사료) 수입조사료 쿼터 탄력적 운용,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지원 등
 - 낙농가는 젖소두당산유량 증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, 사료비 절감은 정부대책 없이 낙농가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.
 - * 젖소두당산유량(통계청) : ('01년) 6,889Kg → ('10년) 8,575 → ('20년) 9,674
 - 둘째, 낙농가 생산비절감 및 경영안정화 대책은 단순히 원유 가격 인하를 위한 명분으로 절대 활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.
 - 셋째, 낙농가 생산비절감 및 경영안정화 대책은 특정지역 조합(낙농가)을 위한 것이 아니라, 전체 낙농가에 해당되는 보편 타당한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단정 지었다.
- 낙농가 생산비절감 및 경영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생산자의견은,
 - ① 사료비절감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(사료안정기금 설치, 수입

조사료쿼터 확대,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지원 등), ②낙농 단지 조성을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, ③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바이러스성설사병(BVD) 청정화, ④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낙농헬퍼(도우미) 지원, ⑤소 폐사축 처리지원, ⑥퇴비부숙도 기준준수를 위한 퇴비사 건폐율 적용제외, ⑦낙농분뇨처리 정책지원, ⑧축사용 전기세 부담 완화, ⑨젖소 동물병원 수의사 인력 확보 등이다.

낙농가단체장 향후계획

-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, “지금까지 농식품부가 낙농 업계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다해 온 만큼, 낙농업계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소통을 통해 진정한 농식품부의 자세가 필요하다”라고 밝히고, “낙농육우협회와 조합장협의회는 열린 자세로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되, 지난번과 같이 유업체 편향적인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청와대를 상대로 한 대정부 강경투쟁이 불가피하다”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.
-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맹광렬 회장은, “지금까지 정부는 낙농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낙농정책을 수립해 온 만큼, 이를 부정하고서는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없다”라며, “협회와 협의회가 한 목소리로 대국회 농정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진력을 다 하겠다”라며 힘주어 말했다. “끝”

1. 낙농제도 개선방향

- 낙농문제는 원유가격 뿐만 아니라, 낙농제도 전반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,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함
 - 낙농제도개선을 표방하면서, '원유가격인하'에 초점을 맞춘 「원유가격연동제 개편」을 중심으로 진행해서는 안 됨
 - * ❶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우유 유통마진부터 근본적 개선 필요, ❷ 국내 사료원료(곡물) 자급 및 축산농가 사료비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
 - 생산자들은 2026년 관세제로화 대비 낙농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절감(切感)하고 있으며, 합리적인 대안이라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자세가 되어 있음
 - * 現 낙농산업은 FTA 수입개방, 코로나19 영향으로 낙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
 - ↳ 現 낙농산업의 문제점 : 국경보호조치 철폐로 국산원유의 자급률하락, 원유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장치 미흡, 시유시장 확대 및 국산 유제품시장 형성을 위한 대책 미진
- 전국적인 수급조절과 농가간 형평성제고를 위한 전국단위(단일)쿼터제 시행
 - 전국단위쿼터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집유일원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
 - ※ 우유의 특수성으로 낙농제도의 포커스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생산자와 유업체간 대등한 거래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음
- 전국단위(단일)쿼터제(안)
 - 원유수급전망, 우유수급계획 등 낙농, 유업 통계 및 정보에 대한 관리기구 필요
 - 계획생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생산자중심의 집유일원화 불가피
 - 수급예측 및 계획에 따른 생산으로 농가의 생산자율권 확보,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한 '한국형 MMB(Milk Marketing Board)' 설치 필요

☺ **선진국과 같이 생산자보드(MMB)를 만들어 생산자율권을 낙농가에게 부여**

- ☞ 음용유는 시장원리에 따라 생산자와 유업체간 대등한 거래교섭을 통해 쿼터, 가격을 결정
- ☞ 가공유는 정부가 개입, 낙농특성인 수요와 공급의 계절적불일치(생산량은 冬高夏低, 소비량은 冬低夏高)에 따른 잉여분은 정부가 개입하여 가공용으로 공급

2.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운영

-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최종안 마련 시까지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논의내용에 대한 언론공개 자제 요청
 - 2020년도 원유가격 인상,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발족 및 1차 회의결과 관련 농식품부의 편향적 언론플레이로 인해 우유 및 낙농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저하 초래
 - * ○○일보(8.22) : “위원회 만들어 우유값 잡는다?.. 정부, 원유값 결정체계 개편 나서”
 - * ○○일보(8.23) : “낙농가의 일방적 우유값 인상 ... 정부도 초강수 맞대응카드”
 - * ○○신문(9.2) : “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국우유”
-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추진 및 초안·최종안 마련 전에 이해관계자와의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(상설화) 마련요청
 - 생산자들은 추진단·자문단에 이해관계자 배제, 연구용역 밀실진행에 대해 농식품부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거수기내지 명분용으로만 활용 우려
 - ⇒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전국민 대상의 공개를 원칙으로 세운 만큼, 이해관계자들에게 추진사항을 사전 오픈·논의를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필요
- 산업을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 온 원로학자의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및 자문단에 포함이 필요하며, 우유유통마진의 제도개선을 위해 공정위 관계자도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 포함 필요

☹️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낙농업계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다해 온 만큼, 낙농 업계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필요함

참고2

낙농가 생산비절감 및 경영안정화 방안 관련 생산자 기본입장

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생산비의 55%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실질적인 절감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.

○ (배합사료)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

○ (조사료) 수입조사료 쿼터 탄력적 운용,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지원 등

⇒ 낙농가는 두당산유량 증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, 사료비 절감은 정부대책 없이 낙농가 노력만으로 역부족임

② 낙농가 생산비절감 및 경영안정화 대책은 단순히 원유가격 인하를 위한 명분으로 절대 활용되어선 안 됨.

⇒ “낙농가 생산비절감 및 경영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었으니, 원유가격을 인하해도 농가 피해가 없다”라는 정책접근은 반대함

③ 낙농가 생산비절감 및 경영안정화 대책은 특정지역 조합 (낙농가)을 위한 것이 아니라, 전체 낙농가에 해당되는 보편 타당한 대책이 되어야 함.